

김동연 아성에 중진 경선 치열 vs 중도 유승민 차출론 무성

☞ 지방선거 돋보기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가운데 단연 주목받는 곳은 대한민국 최대 인구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 경기도다. 이곳 경기도지사를 뽑는 선거에 더불어민주당에선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는 거물급 정치인들이 대거 출마한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야권에 불리한 선거 판세가 조성됨에 따라 중량감 있는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지 않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4년 전엔 0.15%p차 박빙 승부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가 56.40%의 득표율을 기록해 35.51%를 기록한 남경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를 20.89%p 차이로 따돌리며 압승을 거뒀으나 2022년 제8회 지선에선 양상이 달라졌다.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 출신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공천받았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선거 캠프와 대통령실 등에서 대변인을 맡은 김은혜 후보가 나와 맞붙었다. 김동연 후보는 최종 득표율 49.06%였고 김은혜 후보는 48.91%였다. 둘의 득표율 차이는 단 0.15%p였을 만큼 치열했다.

◆與 ‘6선·최고위원까지 대거 출마’

제9회 경기도지사 선거판도 4년 전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양당의 출마 분위

② 최대 인구 거주 ‘경기도’

기부터 사뭇 다르다. 먼저, 민주당은 치열한 내부 경선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인사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6선·경기 하남시갑), 김병주 전 최고위원(재선·경기 남양주시을), 한준호 전 최고위원(재선·경기 고양시을), 권철승 의원(3선 경기 화성병)이다.

이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재선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김동연 지사에 도전한다. 김 지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 논란에서 전력 문제 해법을 제시하는 등 정책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

최근 경기일보 의뢰로 조원씨앤아이와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달 31일 18세 이상 경기도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는 김 지사가 30.0%, 추미애 의원 18.3%, 한준호 의원 7.8%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지사 33.4%, 추 의원 32.7%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지만, 무당층에서는 김 지사 19.1%, 추 의원 5.9%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野 ‘차출론만 무성’

4년 전 초박빙 승부로 4년 후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군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병주 전 최고위원



권철승 의원



추미애 의원



한준호 전 최고위원



김은혜 의원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지난 지선은 0.15%p로 간발의 차 민주당, 거물급 정치인들 출마 선언 국힘, 불리한 판세에 중도 목소리

의 패권의 향방을 오리무중에 빠트렸던 국민의힘이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국회의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 이후

전국적인 여론이 반전되면서 중량감 있는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주자들의 도전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중도 확장력이 있는 후보를 차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차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유 전 의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 “어떤 분은 경기도지사 도전 이야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서울시장에 도전하고 하지만 전혀 생각이 없다” 선을 그었다.

직전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차출론도 나오고 있다. 4년 전 접전을 펼친 김은혜 의원(재선·경기 성남시분당을)과 중도 확장력이 있는 안철수 의원(4선·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경기도지사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론 추이를 지켜보면서 출마 결심을 굳힐 수도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25.8%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안철수 현 국회의원 17.1%, 김은혜 현 국회의원이 16.0%로 오차범위 내의 수치를 나타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김은혜 의원이 42.0%로 가장 높았다. 안철수 의원이 22.6%, 유승민 전 의원이 12.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경기일보 의뢰로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달 31일 1일간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여론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위원회총회에서 이언주 최고위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합당 반대에 사퇴요구까지… 여야대표 수난

與 정청래, 절차적 민주성 문제 지속 野 장동혁, ‘전당원 투표’ 선언

국회의 거대 양당이 ‘전(全)당원 투표’ 국면에 휘말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진퇴 문제 때문이다. 여야 대표가 모두 당내 반발로 인해 수난을 겪는 모양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초선의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6일은 4선 이상 중진 의원 간담회, 10일 재선 의원 간담회를 한다. 3선 의원 간담회도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에 앞서 정 대표는 합당 관련 전당원 투표도 제안했다.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을 한 데 대해 당내에서 ‘독단적 선언’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당내 소통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절차적 민주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면, 합당 명분을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최근 1인1표제가 ‘당원 주권’이라는 명목으로 지난 3일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만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역시 ‘당원 주권 강화’라는 대의를 통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데 대해 당내 반발이 일어났고, 이에 장 대표는 5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재신임 투표’ 성격의 전당원 투표를 붙이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원내, 일부 광역단체장이 유불리에 따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제명하는) 최고위 결정에 불만이 있다고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당 대표 사퇴나 재신임의 목소리가 있다면 저는 사퇴 또는 재

신임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 대표는 당원이 선출한 자리로, 당 대표의 사퇴나 재신임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당원밖에 없다”며 “가벼이 당 대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가벼이 당 대표 스스로 직을 물러나는 것은 당원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신임을 주장하는 이들을 향해 “저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당을 위한 길”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의 ‘전당원 투표’ 선언은 격화되는 당 내홍을 정리하고자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내에서 전당원 투표를 장 대표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는바, 이를 통해 당내 반발세력을 누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박태홍 기자 syj@

李 “수도권 1극 타파하면 부동산 문제해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지방수도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도 수도권 1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면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부동산 문제가 생겼으며, 이를 타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 인구 격차가 무려 100만명이 넘었다고 한다”면서 “전 국토의 12%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와 자원을 이처럼, 소용돌이처럼 빨아들이는 일극체제는 더 방치할 수도 없고, 방치해서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포화가 심화할수록 지방소멸은 가속화될 것이고, 국토활용의 비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잠재성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미 한계에 도달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수도 성장으로 대전환하는 것, 또 이를 통한 국토 공간의 균형적인 이용은 경제 성장판을 다시 열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토대를 쌓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도 수도권 1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가 행정 시스템 전반을 개혁할 것을 주문했다.

또 수도권 1극 체제 타파를 위해 국가

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재정이나 세제나 금융에 대해서는 조달 분야, 국가 조달 분야에서는 지방 우선이나 지방 가산, 가점 제도가 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생산된 물품과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물품의 효용 가치나 효율이 똑같으니, 지방 거를 먼저 쓴다든지 입찰이나 이런 데서 지방 가점을 준다든지 그런 것도 준비해서 시행하면 좋겠다”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 바탕으로 교통 등 인프라 정비에 속도를 내고 공공기관 이전 준비도 서둘러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기업들의 지방 투자 대대적 활성화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서 신속하게 추진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게 되면 이전하는 공공기관에는 구내식당을 만들지 말고 바깥에서 먹게 하는 대신에 직원들한테 밥값을 차라리 지원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구내식당) 있는 거는 일자리 문제나 확보된 공간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새로 옮기게 되면, 지방 활성화를 위해 옮기는 거니까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점심값을 지원해주고 밖에서 먹는 것도 연구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까 얼핏 들었다”며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